

평등사회 프로젝트: 노동과 여성·청년이 만나면 세상이 바뀐다

2026.08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인가? <불평등 이데올로기>(조돈문, 2024)

○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들이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불평등 이데올로기>(2024), 제2부, <표 9.1> 참조.

영역	지배계급 이데올로기		검증 결과
	기본 명제	하위명제	
불평등 실태	불평등은 없다	① 불평등 부재	거부
		② 불평등 수준 경미	거부
		③ 불평등 완화 추세	거부
불평등 결과	불평등은 정당하다	④ 불평등 낙수효과	거부
		⑤ 불평등 순기능	거부
		⑥ 상승이동 기회 보장	각축 (거부 전망)
평등 사회 대안	대안적 평등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	⑦ 평등 사회 대안 부재	각축
		⑧ 평등 사회 이행 불가	수용

<평등사회 프로젝트>

- 제1부.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평등사회 불신**
- 제2부. 불신의 시대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모델**
- 제3부. 계급형성 과제와 노동의 실천: 노동중심성
- 제4부. 평등사회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 "대안은 **구체적**이고, 전략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2-3장. 미국 모델 &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 불평등 대한민국의 '묻지마' 미국 사랑:

* 불평등 불만, 그러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선호;

* 모순적 미국 사랑: 세계 패권국가 부러움; 미국 성공신화에 가려진 문제점; 한미관계의 친근한 미국; 미국-스웨덴 정보 비대칭(스웨덴은 낯설다);

○ 미국 모델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1> 자본의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모델 선호: 시장과 자본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2> 극우 편향 보수 정치의 미국 사랑: 태극기부대에서 윤석열까지;

3> 정부 관료의 민주당 정권 길들이기

* 김대중(소득주도성장의 대중경제론): IMF가 요구하지 않은 IMF plus(1997.12):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 상생의 노사정 관계 시도 기회 소실;

* 노무현(친노동 진보 이미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팀의 노무현 대통령 개입 최소화(2004.8); 한미 FTA 협상팀 4대 선결조건 사전 양보(2006);

* 문재인 '촛불정부'의 기재부: 자산보유세 강화 요구 거부, 정규직 전환정책 무력화(2017);

○ 평등 이데올로기의 패배: 대항이데올로기 주체의 역할 없음 ⇒ 불평등 이데올로기 승리;

* 진보 정치세력: 북유럽 모델을 선호하지만, 명시적 목표로 호명하지 않음; 노회찬이 가장 적극적;

제4장. 국가사회주의 실패: 불신의 시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 동유럽 공산당 정권 붕괴

- 국가사회주의의 경제적 평등 성과;
- 동구권 경제적 풍요의 상징, 호네커 '소비자 사회주의' 동독의 실패: 동독인의 서독행;

○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 1> 경제적 효율성 실패: 중앙계획 기구의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 연성예산 제약으로 경영진의 정치적 교섭 몰두; 경영·기술 혁신 동기 부재;
 - 2> 공산당·국가의 권력 독점: 인민-당-국가의 '주인-대리인' 문제(국가 & 작업장 수준);
 - 3> 동유럽인의 선택: 불평등하지만 풍요로운 자본주의 ⇔ 평등하지만 빈곤한 국가사회주의;
- * [참조] 존 롤스 최소수혜자 보호 원칙의 공정성: 동구권의 기계적 평등은 공정성 실패;

○ 국가사회주의 실패 & 평등사회 대안의 신뢰 추락:

- 1> 후쿠야마와 미국인의 인식 '역사의 종언': 사회주의 실패, 미국식 자본주의 승리로 평가함;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자본주의 다양성 인정하지 않음;
- 2> 동유럽인의 평등사회 대안 불신: 자본주의 이행 이후 불평등 심화 불만; 그럼에도 빈곤한 평등으로 회귀 반대함, 자본주의의 풍요로운 불평등을 감내함;

4.3장. 불신의 시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전략:

* 시민들의 평등사회 대안 불신: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점진적 변화의 접근법 요구됨 = **작은 개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더 큰 개혁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며 개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감;

* 불평등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변혁을 지향함**:

스웨덴의 맥락적 벤치마킹: 스웨덴은 불신의 시대의 평등사회 대안;

* 한국 사회의 객관적 조건 고려함 ⇒ 장기적 전망에서, 점진적 변화 추진함;

○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하위 전략**, 두가지 :

1) 노동계급 중심 **주체 형성** 전략: 불평등 피해자들의 사회세력화;

2) 평등사회 위한 **제도개혁** 전략: 불평등 완화하고, 평등을 실현함;

① 노동계급 계급형성 조건 조성 과제: ② 소득 재분배 통한 불평등 완화 과제:

③ 시장경제 모델 이행 과제:

전략의 성공을 위한 전제: **대안은 구체적이고, 전략은 과학적이어야 함**;

제2부. 불신의 시대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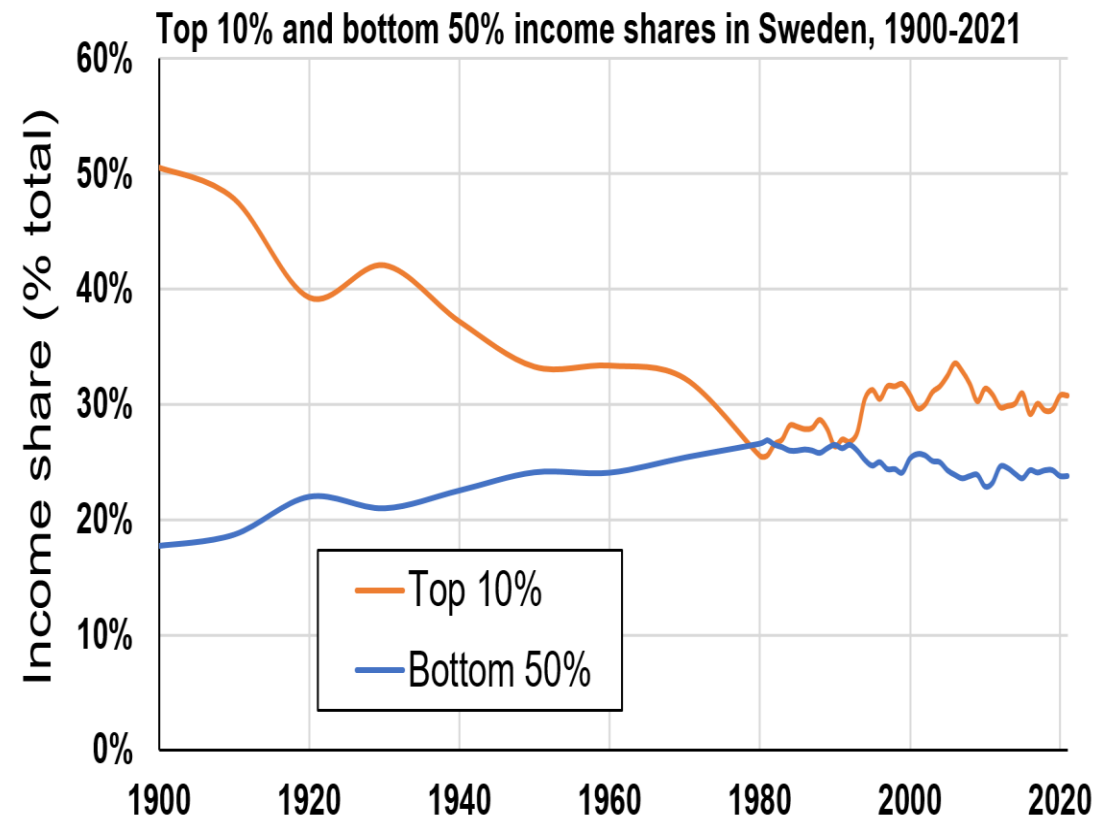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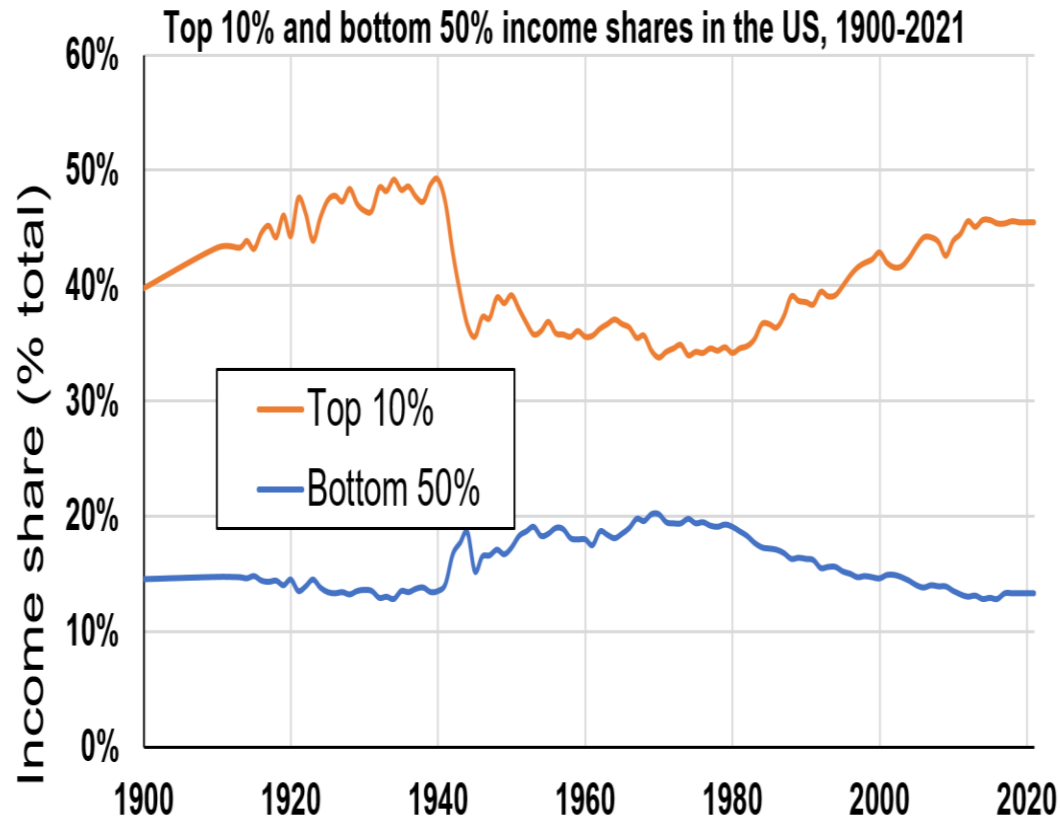
5장, 스웨덴, 불평등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그림 5.1> 소득 상위 1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의 소득점유율: 미국 vs 스웨덴

* **상위10% & 하위50% 격차**: [1900년 ⇒ 2021년]

미국 25.3%⇒32.2%;

스웨덴 31.9%⇒7.0%;



렌-마이드너 모델: 사회·경제정책의 패러다임

○ 렌-마이드너 모델: 사민당 & LO의 정책 목표는 완전고용과 평등분배;

* 1920년대 말 스웨덴 경제위기 & 고용위기: 사민당은 과소수요론의 시각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안함 ⇒ 1932년 집권하며 집행됨;

*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 경제이론 & 사민당의 경제-사회정책 기조 ⇒ 이후 렌-마이드너모델로 체계화됨;

- 1951년 LO 정책연구국의 Gösta Rehn & Rudolf Meidner가 개발함;

① [재정경제 부문] 긴축적 균형재정의 총수요정책: 물가·통화 안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함;

② [노사관계 부문]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체계와 연대임금정책: 동일가치 동일노동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평등을 담보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절제함;

③ [노동시장 부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와 노동력의 효율적 매칭 ⇒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룸;

5.3. 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 불평등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표 5.3> 성평등 지수: 여성 노동자 등 불평등체제 피해자들은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스웨덴	독일	스페인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OECD
〈성평등 종합 평가〉								
OECD 29국 성평등 순위(2026)	1위	23위	8위	19위			28위	
〈노동시장 성차별〉								
고용률(% , 2024년): 전체	76.7	77.4	66.1	71.9	71.7		69.5	70.2
남성	78.1	80.8	70.6	76.3	76.7		76.8	77.0
여성	75.2	74.0	61.6	67.5	67.0		62.1	63.5
남성-여성	2.9	6.8	9.0	8.9	9.7		14.6	13.5
성별 임금 격차(중앙값 기준)								
%(2023년)	7.3	14.2	6.2	16.4			29.3	11.3
〈가사 노동 성 분업〉(2023년)								
남녀 노동 시간 합계(시간)*	7.0	6.4	6.6	6.0		5.1	4.4	6.0
여성 노동 시간 비율(%)	55.7	60.9	68.2	61.7		72.5	77.3	66.7
남성 노동 시간 비율(%)	44.3	39.1	31.8	38.3		27.5	22.7	33.3
남녀 격차(%)	11.4	21.9	36.4	38.3		45.1	54.5	33.3
여성/남성(배수)	1.3	1.6	2.1	1.6		2.6	3.4	2.0

6장. 황금삼각형, 노동-자본 공존의 제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 **황금삼각형**: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철저하게 규제함 + 고용·소득 안정성을 보장함 ⇒ 관리된 유연성과 높은 고용·소득 안정성을 결합함 ⇒ **유연성-안정성 균형**;

* 황금삼각형의 각 구성요소의 **이중적 보호체계**: 전국 수준의 법·제도에 의한 보호 층위 + 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단체협약에 의한 보호 층위;

① **유연한 고용계약제도**: 법규정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타당한 사유로 규제함 +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의 오·남용을 제어함;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 **일자리중개청**이 일자리 중개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노사자율 **고용안정기금**(TSL, TRR 등)으로 해고 통보 시점부터 개입하여 해고(예정)자와 상담하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③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체계**: [공적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보편적 기초실업부조제 & 자율적 실업보험제도의 이원구조 ⇒ [2025.10]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 소득연계성 강화**;

* **노조의 보완적 보상 전략**: 노조원의 Folksam 집단가입 ⇒ 소득보험제(Inkomstförsäkring)의 실업급여로 **소득보전율 80% 보장**;

<표 7.3> 경영진의 평가: 피고용자 이사회 참여의 구체적 항목별 평가(%)

	1999	2009	증감
<긍정적 평가>			
긍정적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64	57	-7
이사회결정은 피고용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림	59	53	-6
어려운 결정들을 집행하기 수월해짐	47	48	1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심층지식 활용 가능해짐	42	46	4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짐	24	30	6
평균	47.2%	46.8%	-0.4
<부정적 평가>			
정보유출 증대의 위험	41	39	-2
너무 많은 무관한 의제들이 제기됨	18	14	-4
의사결정 과정이 힘들어진다	12	9	-3
이사진들 간 갈등의 위험	7	-	-
평균	23.7%(19.5%)*	20.7%	-3.0%(1.2%)*

* 괄호밖 숫자는 1999년과 2009년 조사에 공통된 항목들의 평균값, 괄호안 숫자는 비공통 항목들도 포함한 평균값.

〈표 7.1〉단체교섭 체계: 탈중앙집중화 시도 & 노동의 대응(조정된 산별교섭)

단체교섭 수준	제1기	제2기	제3기
시기 구분*	1954-1983	1983-1997	1997-현재
노사 관계 모델	스웨덴 모델 형성	모델 와해 진행	스웨덴 모델 변형 복원
단체교섭 체계	3단계: 중앙집중화	2단계: 탈중앙집중화	조정된 2단계: FI 산업 협약 추가
〈단체교섭 3수준〉			
LO-SAF	O	X	X
산별(예: 금속노조 & VI)	O	O	O
사업장(예: VVK & Volvo)	O	O	O

* 단계별 변화: 계급타협 (1938), 중앙집중 단체교섭체계 수립(1950년대 초반) ⇒ **노동의 공세(경제민주화: 1970년대)** ⇒ **자본의 공세(탈중앙집중화: 1980년대)** ⇒ 노동의 반격(1990년대 후반);

* 노동조합 성격: 산별노조의 계급조직(LO 조직율 70%, 단협적용율 90% 이상) ⇔ [한국] 기업별 노조 체계의 이익집단(정규직 노조원 이해관계 대변)(민주노조 정체성: 이익집단 > 계급조직);

8장. 스웨덴의 맥락적 벤치마킹: 경제적 효율성 & 사회통합 동시 실현

- 스웨덴: [19C 말] 인구 절반이 버린 나라 ⇒ [현재] 사회적 약자들의 '꿈의 나라';
- EU가 European social model(유럽의 사회적 모델) 주창:
 - * 유럽사회의 사회적 통합 유지하며, 미국의 경제성장·효율성 따라잡는 전략 ⇒ 유럽의 사회적 모델;
 - *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 ⇔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 경제적 효율성 위해 사회적 통합 희생함;
- Economist(2013.2)의 변신: 신자유주의 전도사, 대처-레이건 지지 선언 ⇒ 스웨덴 벤치마킹 독려: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모델 비교;
 - * 스웨덴: 경제적 효율성 & 사회적 통합(불평등 완화) 동시 실현함 ⇔ 미국: 심각한 불평등 폐해;
 - 북유럽 국가들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건강, 행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최고"
- Fukuyama(1989, 1992): 소련 해체 & 동구권 붕괴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 자본주의(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승리;
 - * Fukuyama(2022): 신자유주의와 미국모델의 실패: 불평등 심화 & 지속가능성 결여 ⇒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 & 스웨덴-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도입 절실 주장함; '
- World Bank & IMF: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 ⇒ [2000년대] 신자유주의 폐해 인정, 불평등 해소 위한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 주창함;

8.2. 노회찬의 대안과 이행전략: 스웨덴 모델 & '진보적 대중 정당'의 길

○ 노회찬의 대안은 **스웨덴: 사회주의 이상 실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앞선 나라;

* "진보 정당이 꿈꾸는 건 희한한 세상이 아니에요... **진보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현실**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2014);

*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 사민주의라고 본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보다** 노동권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 곳이 사민주의 국가다"(2014);

○ '진보적 대중 정당'의 길: **최소강령과 노동자 계급형성 전략**(노동 중심성);

* 진보정당의 현실은 다양한 이념적 흐름의 공존: "현대적 진보 정당이 하나의 사상, 유일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최대 강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은 각자의 몫**이며 **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이의 **공존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의 정당을 이루는 **공통분모**이며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최소 강령**이다."(2013)

* "당간부 의식조사에서 북유럽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호감도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갈 길이 전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솔직한 태도인가?"(2013)

* "핵심은 사회에 뿌리를 둔 **진보 정당과 노동조합으로 상징되는 위력적인 운동의 힘**으로,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나 시스템도 작동 불가능하다는 것이 스웨덴 모델이 던지는 역사적 시사점이다"(2009)

8장. 맥락적 벤치마킹: Why not Sweden?

○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모델의 상대적 우위, 파라다이스는 아님;

* 노회찬: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 스웨덴 모델 ⇔ 개량주의 낙인 찍기: 이행전략의 실종

○ 검증된 평등사회 대안: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비교 우위

1> 현존하는 가장 평등한 나라

2> 노동-자본 상생의 포지티브섬게임: 세계 최강의 노동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

3> 불평등체제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성평등, 보편주의 복지국가;

4>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 경험적 검증 완료: 제도의 효율성 & 제도적 상보성

○ 변혁·이행의 정치: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평등사회 실현 과제

1> 스웨덴의 현재는 계급 역학관계의 함수: 스웨덴모델의 형성-훼손-해체-재구축 과정

* 임노동자 기금제의 실패와 재시도 가능성; 정리해고 후입선출제 및 경제민주주의 방어와 훼손 가능성;

2> 스웨덴은 평등사회 이상향의 이행 경로: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 경계의 체크포인트;

3> 스웨덴 모델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결과물: LO와 사민당의 100년 실천의 산물;

* LO-노동계급: 보편 계급이익(연대임금제) & 보편 사회이익(렌-마이드너 모델, 성평등,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천;

4> 스웨덴 모델 넘어서기: 우선적 과제는 노동계급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의 성공;

* 임노동자기금제 실패의 교훈: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 홍보의 전술적 멍청함;

제3부. 계급형성 과제와 노동의 실천

9장.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와 양대노총 비호감

-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 계급형성의 미스매치(정규직 조직적 형성, 비정규직 이데올로기적 형성);
 - * 조직적 형성 실패: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와 계급분절**;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13%);
 - * 이데올로기적 형성 실패: 사회전반적 보수화와 노동자 계급의식 후퇴; 민주노총의 높은 비호감도;
 - * 비정규직: 투쟁 성공해도 조직강화 어려움; 생존 과제와 성공 과제(재능교육 투쟁 vs 희망연대노조);

○ <표 9.7> 노조원과 일반 시민의 양대 노총 호감도

2023.2	민주노총 호감	한국노총 호감
민주노총 조합원	.4279	.2626
한국노총 조합원	.2679	.4301
기타	.1304	.1299
전체 시민	.1430	.1400

- * 민주노총-한국노총 **비호감도**: 각각 **86%** >> 호감도 14%;
 - **정치적 보수, 친자본 성향** ↑ ⇒ 한국노총 호감도 ↑, **민주노총 호감도** ↓ (<표 9.13> 참조)
 - **민주노총**: 국민 밉상 아니라, **보수 밉상**;
- * **노조원**의 상급단체 평가: 호감 43% < **비호감 57%**; 주인-대리인 문제, 조직 통합력 취약;

〈표 9.12〉 노조의 사회적 역할 평가: 긍정 평가 & 정규직 이기주의

사회적 역할(%)	정치 민주화	불평등 완화	비정규직 문제 노력*	평균
① 나쁜 영향	34.0	22.2	45.9	34.0
② 영향 없음	27.0	30.9	38.7	32.2
③ 좋은 영향	39.0	46.9	15.4	3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③ - ①	5.0	24.7	-30.5	-0.3

* ① 노력 없음, ② 보통, ③ 노력함.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 **불평등 완화**(노동-자본 간) **긍정** 평가 ⇔ **비정규직 문제**(노동계급 내) 해결 노력, **부정** 평가(정규직 이기주의);

86% 비호감도는 과도함[민주노총 노조원은 억울하다]: 정치적 민주화는 조금 긍정적; 불평등 완화 크게 기여 & 비정규직 문제 노력 없음 ⇒ 상쇄하면 전체적 평가는 중립적임;

〈표 9.10〉 노동조합의 활동 중점: 현재 & 향후 (단위, %)

노동조합 활동 중점 (2023년)	현재 활동	향후 활동	향후 - 현재
1) 조합원의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	58.7	27.1	-31.6
2) 조합원의 고용 안정	11.6	22.2	10.6
3)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보호	5.8	34.7	28.9
4) 사회 보장, 세제 개혁 등 사회제도 개혁	2.9	15.9	13
5) 정치적 활동	21.0	.1	-20.9
합계	100.0	100.0	

- 노조활동 평가: 사회적 역할 긍정적 평가 ⇔ 일상활동 비판적 평가;
- 노조활동 vs 시민들의 기대: 불일치 ⇒ 노동조합 비호감도 ↑ (<표 9.11> 참조)
- 노조활동의 현재: [이익집단 활동] 노조원의 집단[정규직] 이기주의 (2007/10/17/23 일관됨)
- 시민의 요구: [계급조직 역할]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 보호 (2007/10/17/23 일관됨)<표 10.1/10.2>
- [한국] 기업별 노조: 구조적 이익집단(대우 캐리어의 쇠파이프) ⇔ [스웨덴] 산별노조: 계급조직;

@ 10장.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의 이익집단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 불신]

〈표 10.3〉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 인식: 회사의 비정규직 우선적 정리해고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대응 방식 예상

정규직 노조 대응 방향	사업장			
	타타대우	현대차 전주	현대차 울산	전체
정규직만 보호할 것	35.2%	82.8%	90.6%	77.5%
보통		.6%	3.6%	1.8%
비정규직까지 보호할 것	64.8%	16.7%	5.8%	2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이기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정규직 노조 불신 편차: 공공부문(정규직 전환 반대), 완성차(불파 정규직 전환 반대)에서 높음;
- * 현대차 노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소극적) 반대, 1사 1노조 거부(3회);
 - 타타대우상용차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협, 1사 1노조 적극 수용;
- * 비정규직 주체형성: 생존과제 & 성공과제; 희망연대노조 ⇔ 재능교육 투쟁(성공 집착, 생존 위협);
- * 민주노조운동의 양면성: 민주노총의 계급조직 실천(비정규직 권리입법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투쟁, 전태일 3법 투쟁) ⇔ 생산현장 단위노조의 이익집단 활동(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사례들);

11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계급이익 실천 [확산 추세 ⇒ 더욱 확산해야]

○ 최저임금 투쟁과 임금연대 활동 [하후상박식 임금인상, 정규직 임금 양보]

- 1>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투쟁: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우선적 수혜자;
- 2> 민주노조의 임금연대 활동(하후상박형 임금인상): 현대차·기아차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 노동조합의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연대 활동 [정규직 전환 지원, 정규직 임금 양보]

- 1> 한국노총 금융노조
- 2> 금속노조와 타타대우상용차노조
- 3>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하철·부산지하철노조
- 4>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 5> 사무금융노조와 우분투재단

○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교섭 지원 [조직화·통합노조, 공동교섭·공동투쟁]

- 1>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조직화 효과] 비정규직 ↑ > 여성 ↑;
- 2> 전략조직화 사업 확산과 금속노조: 공단지역 중심;
- 3>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노동조건 개선 & 조직화 병행; [조직화 대상 확대] 정규직 ⇒ 비정규직: 직고 비정규 ⇒ 간접고용 ⇒ 특수고용; [사업장 확대] 중소병원 ⇒ 장기 요양기관 ⇒ 하청업체;
- 4>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 & 비정규직 조직들의 공동교섭·공동투쟁 병행: 자회사 거부, 직접고용 전환, 노정교섭 요구; 공무직위원회 설치 성과(2019);
- 5> 특수고용직 노동3권 과제와 사무금융노조;

○ 민주노조의 딜레마: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 어용노조는 순수 이익집단: 딜레마 없음

12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사회이익 실천: 시민들은 고마워하는가?

○ 정치민주화 투쟁과 '보수 밀상'의 역사적 기원

1>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민주노조 건설:

- [전두환 4.13 호헌 조치] 한국노총 지지 성명 ⇒ 제2금융권 노조, 보건의료 노동자: 호헌 철폐 성명, 민주노조 운동;
- * 전노협(1990.1) 탄압; 노동법 재개정 총파업(1996.12-1997.2);

2> 노동탄압 분쇄 및 박근혜 퇴진 투쟁:

- * 이명박근혜정부의 전교조('노조 아님' 통보 2013.10) & 공무원노조(설립신고 반려 5회) 표적 탄압;
- * 민주노총 본부 침탈(2013.12) ⇒ 박근혜정부 퇴진 투쟁 ⇒ 민중총궐기 대회 방식(2015) ⇒ 총력투쟁 방식(2016);

3> 윤석열 퇴진 투쟁과 민주노총 생존 과제:

- *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2022.11), 건설노조 '건폭' 규정·탄압(2023.2), 회계자료 제출 및 회계 공시 강제;
- * 2024.12.3 비상계엄 이후 무기한 총파업 투쟁 선언(총파업·광장 투쟁 참가 수준 낮음);
- 4> 군부·극우 정권의 민주노조운동 죽이기: 한국노총엔 대화와 협력 의지 강조, 민주노총엔 강경 노동 운동 불법행위엔 강경대응 방침 강조 ⇒ 극우정권 시기 민주노총 노조원 감소 효과;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사회이익 실천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시장경제 모델 변화:

- 1> **철도·발전·가스 사유화 저지 투쟁**: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가입 & 사유화 저지 투쟁 ⇒ 철도·발전·가스 사유화 저지 투쟁 성과;
- 2>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은행 사유화 저지 투쟁**: 국민-주택 은행 강제 합병 & 사유화 추진 ⇒ 금융노조 파업 투쟁 & 노정합의(2000.7) ⇒ 금융노조 합병 백지화 요구 파업 투쟁 & 중단(2000.12) ⇒ 정부는 합병·사유화 강행 & 인력감축 자제: 금융노조의 이익집단 성공, 보편 사회이익 포기;
- 3> **대우자동차 독자회생 투쟁**, 완성차 4사 노조 연대 파업: 정부의 해외매각 강행 & GM인수 위한 **정리해고 1750명**(2001.1) ⇒ **비용절감 효과는 2년간 875억원**(노조가 제안한 고통분담액은 1825억원으로, 2배가 넘음);
- 4> KT의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KT완전 사유화(2002.5) 이후 연매출 10조원 이상, 수익성 10% 정도 유지 ⇔ 설비투자비 반감, 연구개발비 반감, 정규직 1/3 감축, 비정규직 1만여명 해고; 자사주 공적소유 전환 거부;

○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

- 1> **사회개혁 투쟁과 의료보험 통합**: [1995년] 사개투 & 의보연대회의의 투쟁(보편주의 실천) ⇒ 1998.2 노사정위 합의, 1998.12 국민건강법 통과, **2000.7 시행: 지역 & 직장 가입자 통합**;
- 2> **철도노조의 사유화 저지, 공공성 강화 투쟁**: 김대중 정부 사유화 추진 ⇒ 총파업 돌입 직전 **노정합의, 노무현 정부 민영화 철회**(2003.4) ⇒ 이명박근혜 재추진, 윤석열도 **분할 사유화 재추진** ⇒ **파업투쟁**으로 사유화 부분 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
- 3> 윤석열 정부 시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 공공요금 국가 책임 강화 요구;
- 4>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투쟁**: 총파업 돌입 직전 **2021년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인력 확충 ⇒ 윤석열 **9.2합의 이행 거부, 의료 민영화 재추진** ⇒ 2023.7.13-14 총파업 투쟁 ⇒ 정부의 협의 약속;

12.5. 보편 사회주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 정치민주화 투쟁의 비용: '보수 밀상'과 노동 탄압

* 민주노조운동: 반독재 민주화 투쟁 ⇒ 독재·극우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

○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추진: 1-2차 민영화 계획으로 공공부문 & 금융기관 무더기 사유화 추진;

* 서비스의 효율성: 공익성·보편성이 아니라 수익성으로 평가함;

* 신자유주의 대동맹(보수 기득권세력 & 집권 민주화 세력): 이데올로기적 공세 ⇒ 신자유주의 반대, 사유화 저지 투쟁 주체(민주노총 & 진보 세력) 사회적 고립;

○ 민주노조 투쟁이 없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도 없다

* 철도 사유화: 2002년 투쟁으로 일시적 중단 ⇒ 이후 사유화·외주화 재개 & 노조 투쟁은 반복됨;

- 이재명 정부 KTX-SRT 통합 추진: 시설-운영 통합 없는 절반의 성공;

* 보건의료 민영화: 보건의료노조 2021 총파업투쟁으로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문재인 정부 이행 않음, 윤석열 정부 이행 거부 & 공공의료 훼손 추진 ⇒ 2023년 7.13-14 총파업 ⇒ 보건복지부 차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약속;

시민들은 고마워하는가? **NO!** (∵ 시민들은 **모른다**) [시민들의 민주노총 **비호감도 86%**는 무죄]

13장.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 위기의식 없는 '위기의 조직'

- 1> 호감 노총서 비호감 노총으로: [시민 호감도] 66.4%(1997, 국민적 기대) ⇒ 14.3%(2023.2, 노조원 자부심 추락);
- 2> 위기는 체감해도, '위기 의식'은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2023.12): 위기극복 전략은 선거 의제 안되었음;
- 3>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하려면?: [실패한 리더십] 민주노총 노조원의 자부심을 되찾아 줘야 함;

○ 임기 3년에 갇힌 전략: 단기 업적주의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 1> 집행부 임기 3년에 갇힌 발전전략: [단병호집행부 이후] 집행부별로 발전전략 제출함(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불과함)
- 2> 민주노총 역사를 부정하는 민주노총: 사업의 연속성 강조 않는 신상품 콤플렉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전태일3법 투쟁: 보편 계급이익 & 보편 사회이익 실천 ⇒ 국민적 신뢰, 노조원 자부심의 근거);
- 3> [제안] 10년 단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조직 통합 실패한 '결정 장애': 적대적 관계에서 상생의 정파등록제로

- 1> 중증 '결정 장애', 조직적 통합성 실종
 - 2> 오래된 문제의식, '정파'가 방치한 '정파' 문제: 정파 분열이 민주노총 리더십 추락의 원인(2009년); 결과는 리더십 불안정;
 - 3> 정파 갈등 현실 인정하고,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조건 형성할 것;
 - 4> [제안] 정파등록제 도입: 정책 경쟁 & 공론화 기능 ⇒ 정파들은 경쟁하며 공존, 상생하는 관계, 현장조직은 생산현장 계급형성의 구심점 역할 복원;
- * 지도부 비판하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함 & 만병통치약 타령 무책임한 비판 자제함 ⇒ 리더십 안정화될 것;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 총연맹-노조원의 주인-대리인 문제: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 1> 동원의 논리와 주인-대리인 문제: 노조원을 투쟁 참여 숫자로 객체화하며 동원함 ⇒ 주인-대리인 문제;
- 2> **주인-대리인 문제** ⇒ **노조원의 비호감도 57%**: 무관심·비협조의 소극적인 부정적 상호성 선택함;
- 3> [제안]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노동/노조의 힘은 노동자의 행위 의지에서** 나옴:

○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후퇴**: 경제적 전투주의에서 **계급연대 실천**으로

- 1>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 * **투쟁과 교섭은 양자택일의 선택지** 아님: 투쟁도 교섭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급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 2>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후퇴**
- *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안정성 요구** ↑ ⇒ 노동조합에 대한 이익집단 역할 요구 ↑;
- * 계급성 후퇴, 이익집단 실천, 전투주의 ⇒ 생산현장의 **경제적 전투주의**: 경제적 실리주의와 함께 노동자 물질주의 & 이익집단 요구 강화;
- 3> [제안] 계급형성 위한 **계급연대 실천 확산**:
- * [단위 노조 수준] 계급연대 활동: 임금연대, 고용연대; 비정규직 조직화, 단체교섭 지원, 공동투쟁;
- * [총연맹 수준] **전태일 1.5법 입법화**(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정의 확대), **초기업교섭 제도화 & 단체협약 효력 확장**;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 계급의식 불균등 발전: 노동문제 넘어, 노조-단체 동행

1> 계급갈등 함정과 계급형성 과제

2> 계급의식의 불균등 발전: 자본의 일방적 지배 고집, 네거티브섬 게임의 계급갈등 함정 ⇒ 계급 적대성 발달, 사회전체성 & 대안 인식 저발달;

3> [제안] 노조-단체 동행 프로그램

* 노조원들의 불평등 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약함;

* 사회운동단체들(보편사회이익 실천)과의 연대 ⇒ 사회 전체성 의식을 배양하고 계급의식의 균등 발전 & 정치세력화 리더 훈련(참조: 브라질 룰라의 정치 민주화 투쟁, 스웨덴 뢰벤의 경제위기 협약);

- 여성, 청년 등 불평등체제의 피해자가 주도하는 단체 우선;

○ 사회적 책임성 결여: 민주노총 거듭나기, '감동'과 함께

1> 결정 장애, 사회적 합의 장애: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 합의안 도출 ⇒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결(2019.7.23);

2> 사회적 책임 기피, 상호성 원칙 위반: [제3자 관점] 원포인트 대화 제안, 합의 ⇔ 합의안 서명 거부함;

* 기후위기 & AI 기술혁명 대응: '정의로운 전환' 위한 사회적 대화 요구: ILO, EU, 민주노총 산별·지역 조직;

- 사회적 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함;

3> [제안] 제3자 관점 필요성: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보편 사회이익 실천;

* 보편 사회이익 실천 ⇒ 계급 헤게모니 강화 ⇒ 노조원의 자부심,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

4> [제안] '감동'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거듭나기;

* 국민적 동의 없는 투쟁: 국민을 겁박하는 공포 마케팅 ⇒ 노동탄압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 노조원 자부심 ↓;

* 희망버스 운동의 교훈: 보편사회이익 투쟁은 더 큰 감동 줄 수 있음: 여성, 청년은 최우선 고려 대상;

제4부. 평등사회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14장.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이행 비용

〈표 14.1〉 사회·경제 체제의 운영 원리 비교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고전적 맑스주의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체제 구성요소〉				
소유 체제(생산수단)	사적 소유	공적 소유(국가 독점)	공적 소유	공적 소유(포괄적)
자원 배분	시장	중앙 계획	중앙 계획	시장(사회적 조절)
권력 행사(국가·기업)	전제적/민주적	전제적	민주적	민주적

-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풍요로운) 평등사회':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민주노동당 강령 전문, 2000): 스웨덴 모델 + 시장 사회주의;
- 핵심적 생산수단과 사회서비스 인프라는 공공의 소유;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시장을 허용하되, 사회적으로 규제함;
 - 국가와 사업체 수준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 정치적 민주주의 & 경제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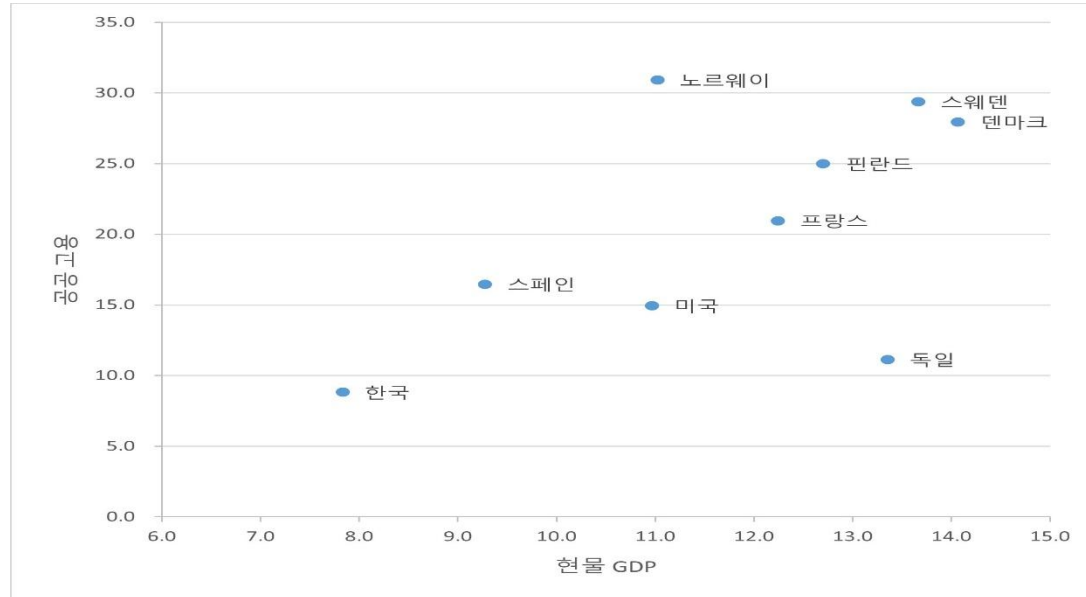
15장. 부자 증세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표 15.4〉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 위한 조세 체계

자원 유형	특성	접근법 원칙	시장 규제/개입	조세 제도
〈소유 자산과 자산 수익: 사회적 규제 & 책임〉				
생산적 자산 (물질적 자본)	경제 기여 높음 / 국가 간 이동성 높음	소유 구조 개입	사회적 소유 확대/ 공동 소유 공동 경영(cogestión)/ 임노동자기금제	자산세 상대적 감면
		소유권(이윤 처분권) 개입/규제	대·중소기업 이익 균점 / 사적 자본 이윤의 공익적 활용	잔여청구권 인정: 자산소득 과세, 누진세율 법인세
비생산적 자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경제 기여 낮음 / 국가 간 이동성 낮음	자산 수익(지대: 불로 소득) 사회환원	사회적 상속(청년 기초자산제) / 주거권, 보육권 보장	징벌적 누진세율 자산보유세
〈노동 소득: 분배 & 재분배〉				
노동계급 임금 소득	노동의 대가 / 가치 생산 보상	생산성 기여 보상 / 물적 생존권 보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연대 임금 정책 /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	최저 수준 소득세율
중간계급 임금 소득	가치 생산 보상&지대	충성 지대·기술 지대 사회적 공유	지대 소득 높은 세율	누진세율 소득세
경영진 보수	사용자성 자기 급여	자기 책정 급여(지대) 사회환원	도덕적 해이 응징: 최고임금 규제	높은 최고 세율의 징벌적 누진세율 소득세

현물 급여 확대 & 조세부담율 상승: 효과?

〈그림 15.3〉 GDP 대비 현물 급여 비중에 따른 공공 부문 고용 비율, 2021년 (단위, %)



* 현물급여 확대 ⇒ 공공부문 고용 증대;

〈그림 14.3〉 조세 부담 수준과 소득 재분배 효과(2021년 기준)



* 조세부담율 상승 ⇒ 소득재분배 효과;

16장. 성차별 지옥과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 '성차별 대한민국'

- **성평등 종합순위**(OECD 29국, 2026): 스웨덴 1위, 한국 28위;
- **성별 임금격차**(2023): 스웨덴 7.3% < 독일 14.2%, OECD 11.3% < **한국 29.3%**;

○ 한국사회의 성평등 착시 현상:

- **사회의 남성 편향성 평가**(2018): 스웨덴 43% > 한국 26%(남성 11%, 여성 42%);
- 한국사회가 스웨덴보다 더 성평등(?): **한국인의 성평등 착시** 현상, 특히 남성은 심각;

○ 성평등 실현 인식의 남녀 시각차: [한국] 확대 추세 ⇔ [서구] 축소 추세;

- * 한국 **여성의 성 불평등 의식화** & **남성의 퇴행**(안티페미니즘 & 백래시 정치);

○ 여성의 불평등 불만, 대안은 있는가?

- * 한국 여성: 불평등 체제엔 불만, **평등사회 대안엔 소극적**
- * 고부담·고복지의 재정지출 증대 의견 약화;
- * **복지증세, 증세부담 의향은 남성보다 약함**; 보건, 돌봄, 교육 등 복지재정 지출 증액에도 소극적;

'성평등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성평등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조합의 역할:

- 1) **노조원 여성의 의식 우위**: 불평등 체제 비판 의식, 평등사회 대안 인식,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 인식;
- 2) 여성의 복지국가 의식 & **노동조합 효과**:
 - **보편 사회이익 실천 요구 투쟁 경험**(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 내면화**;
 -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 투쟁 성과 경험**: 긍정적 변화 경험 ⇒ 불평등 완화, 평등 실현 믿음 ↑;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동현장의 성평등 실현 과제:

- 1)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평등공시제로 현재 30% 정도에서 1/3(10%)로 축소 목표;
- 2) **경력 단절 예방 & 일·생활 병행 보장**: 육아휴직제 대폭 강화, 보육서비스 국가 책임제;
- 3) **돌봄 등 여성 밀집 직종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해결**:
 - *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비중 대폭 확대, 저평가된 사회서비스 노동의 재평가, 돌봄노동 숙련형성 지원;

○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투쟁과 **노동-여성 동맹**의 중요성: **여성 노조원/노동운동**의 구심점 역할 요구됨;

* **여성의 주체 형성 & 변혁 동맹 중요성**: [권력자원론] 스웨덴, 니카라과 경험;

*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위한 전략적 목표**: [스웨덴 경험] **성평등 실현 &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

-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성차별 문제 해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 국가인권위의 법제정 권고(2006) ⇔ 보수 양당의 법제화 거부: 조직화된 보수 교단 & 극우 안티페미니즘의 위력;

17장. AI 시대 불평등과 청년의 전략적 선택

○ 시대적 과제와 청년세대

1> **완수된 과제**: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

2> **물려받은 과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 저소득층 청년;

3> **새롭게 부각된 과제**: 성 불평등과 저출생:

* **저출생 이유**: [남녀] 경제적 부담; (여성) 일·생활 양립, 경력 단절 부담, 개인적 자율성 희생;

청년세대 과제들의 **부담 불평등**(성별·계층별):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 여성 청년**;

○ AI 시대 일자리 양극화,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표 17.3> (* 중노출, ** 중보완.)

		AI 보완도	
		고보완	저보완
AI 노출도	고노출	의사, 변호사, 판사, 전문직, 경영진, 기술직	통신판매원, 사무보조원, 경제학자**
	저노출	외과의사*, 항공기 조종사*, 무용수·공연자**, 트럭 운전기사**, 숙련 기계공**, 공예품 제작자	주방 설거지, 단순 조립, 저숙련 육체노동

* AI 기술의 일자리 충격: **고노출·저보완 일자리부터 대체**(고노출 사무직에서 저노출 육체노동으로 확대됨); 반복형 일자리 사라지고, **남은** (비반복형) **일자리**의 양극화; (저보완 업종) **청년 고용 감소**;

*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금융자산 수익률 상승** ⇒ 자산불평등 심화 & 유자산-무자산자 소득 양극화 심화;

17.3. 청년은 모순적 세대: '불만은 있으나 분노는 없다'

○ 비판적 사회의식, 복지증세 부담 거부:

* 기성세대보다 작은 정부론 강함:

○ 모순적 경험, 모순적 의식:

* 신자유주의 & 시장경쟁 질서 ⇒ 각자도생 전략 & 기대수준 하향조정;

○ 청년은 평등사회 동맹 주체가 될 수 있는가?:

YES, 청년은 '상호적 존재' <그림 17.1>

* 증세부담 의향: 정권의 상호적 공정성 평가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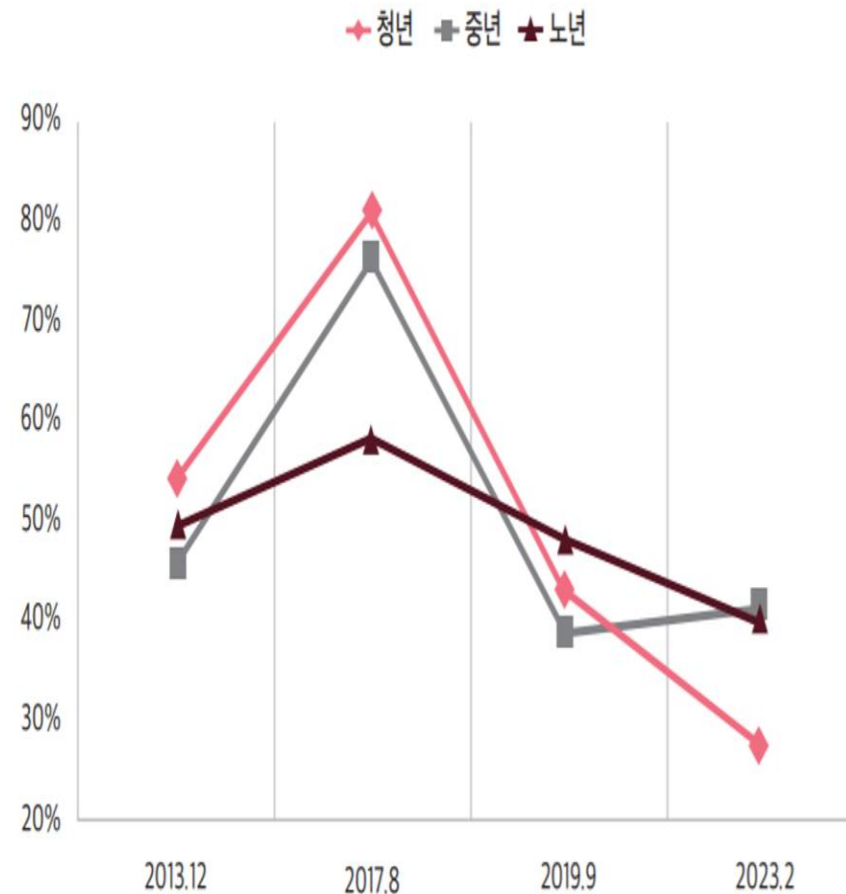
- 정권의 사회경제 개혁 의지 변화 ⇒ 신뢰·협력의 관계(긍정적 상호성) 강화 혹은 불신·보복의 (부정적 상호성) 강화;

- [비교] 노년세대: 변화 거의 없음;

* 청년 세대의 이념적 양극화: 흡수저 여성 ⇔ 금수저 남성;

* 청년 세대의 당면 과제: 일자리 > 주거, 보육;

<그림 17.1> 세대별 복지증세 부담 의향 변화, 2013-2023



17.4. 평등사회 실현 위한 노동-청년 동맹 전략

1> 청년 일자리 보장제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 * 청년 NEET(학교 밖 무직 청년): 한국(15.8%)은 스웨덴(7.1%)의 두 배;
- * 청년(일자리)보장제: EU는 스웨덴(1984년 세계 최초 도입) 벤치마킹 독려; 학업-취업 상담 & 구직활동 지원의 맞춤형 서비스; ALMP 강화;
- * 현물급여 중심 사회지출 증대 ⇒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10%p 증대하면, 275만개 일자리 창출;

2> 보육·주거 국가책임제와 노동-청년 동맹: 청년 기본권(노동권, 주거권, 보육권) 국가가 보장함;

- * 스웨덴 사민당 정부: 1965-74년 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130만호 건설 실적):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1945)에서 24%(1980)으로 급상승함;
- * 공공임대 주택 건설: 10년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7%에서 30%로 높일 것: 20%p(450만호) 증대 = 한해 20만호 건설 시작, 점차 확대 + 민간 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
- * 아동보육 재정 지출: GDP의 0.9%: 스웨덴 1.6%의 절반 수준;

3> 청년 기초자산제와 사회적 상속: 한국 자산불평등 심함, 불평등 대물림 더욱더 심각해질 것 ⇒ '사회적 상속'(사회적 자산의 공동 상속)이 필요함;

- * 청년 기초자산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대학 4년 등록금 합계) 상당의 기초자산 가상 계좌;
- * 청년 기초자산기금은 사회적 소유의 한 유형: 청년은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음; 사유가 인정되면 가상 계좌에서 지분의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청년 일자리보장제, 국공립·지방대 등록금, 주거권 보증금과 임대료);

18장. '응원봉'도 촛불의 실패를 되풀이하는가? : 평등사회 프로젝트와 '응원봉'의 미래

1. 상생의 계급관계와 포지티브섬 게임
2. 촛불의 실패와 응원봉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갈림길
3. 응원봉으로 만난 노동과 2030 여성
4. 노동과 여성·청년이 만드는 상생의 사회

[Q&A]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합의는 '대승적 결단'인가?

○ 평등사회 프로젝트의 노동중심성: **노동-여성·청년 동맹 필요성**

* "노동 없이는 안되지만, 노동 만으로도 안된다":

18.1. 상생의 계급관계와 포지티브섬 게임

1> 평등사회 스웨덴은 계급타협의 산물

* 스웨덴: 20세기 초까지 첨예한 노사갈등의 계급갈등 함정 ⇒ [노사가 갈등 대신 공존을 선택함] 1938년 살트쇠바덴 협약의 계급타협;

@ 2> 한국은 계급갈등 함정(네거티브섬 게임): 자본의 일방적 지배 방식 고집 ⇒ 노동은 불신·보복;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1998.8) 두달 뒤 기아차 인수(1998.10);

*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흑자, 타 부문 적자; 그럼에도, 흑자 핵심 영도조선소 의도적 수주 실적 '0';

- 고용안정 협약에도 정리해고 추진 반복함 ⇒ 희망버스 투쟁: 5회, 연인원 5만명 참가;

* 단병호 위원장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지려고 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 2003.9)

@ 3>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뒤쳐진 임금인상률:

* 1997~1998년 이후 임금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 확대;

4> 포지티브섬 게임과 긍정적 상호성의 힘

* 스웨덴 자본은 일방적 지배 불가능 인정하고 계급타협 선택함(1938) ⇒ 노사 상호 신뢰로 포지티브섬 게임:

2008-09 세계 경제 위기 하 노사자율 위기협약 ⇒ 스웨덴은 경제위기 타격 가장 심하게 받았지만, 모범적으로 위기 극복했음;

* 긍정심리학: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 인식 ⇒ 상호신뢰, 긍정적 정서 ⇒ 직무만족도, 직무몰입도 상승 ⇒ 창의성과 생산성 ↑;

18.3. 응원봉으로 만난 노동과 2030 여성

1> 변혁의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

- * **민중항쟁, 정권 교체, 변혁 실패**: 항쟁 **민중의 퇴장** ⇒ **대리정치의 실패**(주인-대리인 문제);
- 4월 혁명, 광주항쟁, 6월 항쟁, 촛불 항쟁; [참조] 러시아 1917년 2월·10월 혁명의 교훈;

@2> 대리 정치의 한계와 사회변혁 과제

- * 응원봉 투쟁 이후 **대리정치의 한계**: [징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 20년 연장 ⇔ **국민여론의 압도적 찬성(반대의 2배)**; 국가권력은 "사회적 합의"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 필요성 강조;
- * **국가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 조직화된 보수 개신교 세력 ⇔ [**무시하는 것**] 여성과 국민여론;

3> 2030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주체 형성: **2030여성의 높은 참여율 & 사회적 소수자의 인정투쟁**(‘모두의 약속’은 성공의 징표); [대표적 소수자] **TK의 딸들, 부산 온천장 노래방 도우미**: 항쟁으로 정권교체 되어도, **"차별은 남을테고 우린 여전히 투쟁할 게 많다"** "두 발 뺀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 주시길"

4> 2030 여성이 발견한 민주노총의 존재: 노동과 2030여성의 동맹 가능성 확인;

- * **2030 여성 & 사회적 소수자: 정권교체 이상의 사회변화 요구함** ⇒ 정권교체 요구는 떠날 것, 광장에 남아 투쟁할 **민주노총의 존재 발견** '권력 없는 자들의 권력';
- 2030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민주노총과 투쟁 주체들에 대한 연대활동 확산: '말벌 동지들'의 투쟁현장 적극 결합;
- * 12.3 '계엄의 밤' 150분 국회 앞 진보세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의 한강진 발언: 촛불항쟁 비교;

18.4. 노동과 여성·청년이 만드는 상생의 사회

1> 평등사회 염원 존재, 평등사회 동맹 가능성;

* [윤퇴청 설문조사 2025.1] **응원봉 참여 청년들 요구: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63.1%); 여성이 남성보다 10.9%p 더 높음(2030 여성의 성차별 현실에 대한 불만도 기여함)

* **응원봉 투쟁: 정권교체 이후의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 강했음**(촛불항쟁과의 차이):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경험 때문;

@2> 노동과 여성·청년의 **평등사회 동맹** 필요성;

* **광장밖 청년들**: 가장 큰 관심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성평등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 ⇒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보육의 국가 책임제: 민주노조 투쟁과 **노동-여성·청년 동맹 필요성**;

3> 평등사회 실현 위한 **복지증세 동맹** 필요성;

* **부자증세**: 불평등 완화 효과 & **기득권 세력의 저항** ⇒ **평등사회 동맹**으로 복지증세 관철 가능;

4> **상생을 거부하면 공멸**이다:

* **스웨덴**은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자본도 행복함; **비결은 포지티브섬 게임**;

- **최소수혜자 보호** 원칙 ⇒ 모두가 행복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 권력의 정당성 ↑ (지배세력의 통치 철학: 일방적 지배 아닌 상생);

* **권력도 상생을 거부하면 공멸**: 맥베스, 윤석열이 증거; [관상] 한명회 등 권력자들은, 바람의 존재를 보지 못함;

- [**사회적 관계의 상호적 공정성**] 지배자-피지배자, 자본-노동,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의 **상생(아니면 공멸)**;

[Q&A]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합의는 '대승적 결단'인가?

○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2026.5.20)**는 '최악의 담합': 교섭권 초기전(초기업노조 삼성전자);

* 성과 인센티브 1.5% & 반도체 특별 경영성과급 10.5% ⇒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의 12.0%**;

* 성과급 차등 지급: [2026년 영업이익 300조 원] 반도체(DS) **메모리 6.3억**, 비메모리 1.6억, **비반도체 DX 600만원**; 정규직의 성과급 격차 최대 100배 이상, **3.5만 사내하청은 배제**;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

* 전삼노: 영업이익 1%를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요구안 제안 ⇒ 초기전 거부함;

* 성과급 합의 불공정성, '국민 밉상' 초기업노조: 위험업무 담당 비중 높은 사내하청 배제;

○ **삼성 노무관리 전략**(무노조/노조탄압): **삼성맨 자부심, 물질적 보상** ⇒ 성과급 합의는 물질만능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실현: 초기전은 **삼성 재벌의 '모범 사육'** 결과물:

○ **반도체 부문**의 초과이윤: 정부의 반도체 **전략기술 지정, 세제 혜택 & 공적 자금 지원**;

1) **초과세수**: 정부가 집행; **일반회계 예산과 분리**하여 전략적 활용;

(1) **핵심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기초과학 연구 지원: ① **공익·환경 중시**하는 AI 인프라 구축과 피지컬 AI 생태계 강화; ② 탈탄소 기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③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2) 상당한 초기 설비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건설·구축**: 공공 임대 주택, 공공병원, 공공 보육·요양 돌봄 시설;

2) **초과이윤** ⇒ 신규발행 주식으로 '**사회공유기금**'에 적립: ① '**초과이익 환수제**'로 정부 지원금과 세액공제액의 일정 비율을; ② 최고임금제 도입하여 **최고임금 상한을 초과**하는 노동 소득분과 상응하는 자본 소득분;

* **기금 운용은 사회적 협치**: 사회적 소유의 한 유형; 자본 형성 촉진, 초국적 자본의 과도한 이동성의 폐해 최소화; 공익 실현 위한 투자 전략;

감사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xenews/>



“두루미가 있어 하늘은 더 아름다워지고, 하늘이 있어 두루미도 더 아름다워진다”
<계급론자, 연구자·활동가로 살아가기> (경제와사회, 2019)